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먹구름

전남도가 재도전에 나서는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재도전 공모에 나서기도 전에 지역 농민단체와 일부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스마트팜 혁신 거점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됐고 2차 공모에는 2곳이 추가로 선정된다.

정부는 생산과 교육, 연구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밸리를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고흥군을 2차 공모 후보지로 신청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700여억 원을 들여 유리온실과 실증단지, 청년보육단지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차 공모에는 전남 고흥을 비롯해 경남 밀양, 강원 청천, 경기 파주, 충북 제천, 충남 부여 등 6개 지역이 치열한 기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 재도전 공모가 출발하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1차 공모 때 해남이 실패한 과정에서 지역 여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농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될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는 이날 공동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농민 중심 사업이 아니라 토건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다"면서 "농민들은 1차 공모 때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 규정하고 사업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고 공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없는 현재도 시설 하우스, 노지 체소 가격이 폭락해 농작물을 같이 업고 있고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피망, 토마토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수입 통신물로 폭락을 거듭했다"면서 "가격 안정 대책도 없이 생산시설만 늘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어 "개소당 638억 원을 들여 매년 50명의 청년농 육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도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진청, 각 지역 생명과학고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국에 4개소나 실증 교육 연구 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대규모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농민단체 "농업계의 4대강..공모 중지해야"

정의당 "농업문제 엉뚱한 곳서 해결책" 지적

예산을 몰아주자는 심산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농부들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당초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한다고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수출 실적은 18%에 불과 했다"면서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농민들의 소통 공간을 넓히겠다는 김영록 도지사는 왜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를 한 번도 공론화하지 않는지, 왜 농민들과 협

의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도 곳곳에 시설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민들이 대체 작물을 찾지 못해 비비름만 펼려이고 있는 하우스를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현재 농업의 문제는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님에도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농부들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산량의 수출 실적 18%가 잘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남인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면서 "일단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2차 공모에서 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특별한 졸업식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교무위원과 박사학위생들이 졸업을 알리는 고유례(告由禮)를 봉행 후 졸업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교육부, 조선대 총장 직위해제 '엇갈린 판단'

교육부 "직위해제는 부당" vs 법원 "적법한 조치"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법원과 교육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유권해석이 갈린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은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개학을 앞두고 학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 심사에서 법인 이사회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직위해제)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 만한 시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측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민사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총장이 조선대

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기처분 신청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에 해제 시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거나 대학이 직위 해제 시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대학이 가진 인사자령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총장 사퇴를 요구해 왔던 학내 구성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행정을 관掌하는 교육부와 법원의 실정법상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난감한 상황에 빠진 대학 측은 26

일 법인 정기이사회를 열어 강 총장의 해임 등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법원이 유권해석을 달리한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은 학내 계시판 등을 통해 강 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강 총장에 대한 이사회에 해임처분을 요구했다.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10% 정원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 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강 총장 측은 직선제 총장으로서 합법적 임기 보장과 학교의 장기적인 안정을 이유로 복귀를 원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춘정 기자

여수리조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여수의 한 휴양시설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여수시 한 리조트 객실에서 A(53)씨와 아내 B(50·여), 10~20대 남매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리조트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리조트 직원은 이날 오전 퇴실시간인 11시50분께 객실 문을 열어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전북에 사는 A씨 가족은 전날 오후 리조트 객실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쓰여진 종이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26일 부검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속도로 터널서 트레일러 충격 화물차 불

25일 낮 12시23분께 보성군 겹백면 남해고속도로 초암산터널 순천 방면 2차로를 주행하던 김모(62)씨의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불이 났지만 5분 여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터널 중간 지점에서 안전조치를 해 주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다면, 사고 수습과 견인 과정이 지체돼 이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 넘게 통제(국도 2호선 우회)되고 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경찰, 위조수표로 귀금속 구매한 20대 추적

경기 수원시 한 금융방에서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위조한 고액 수표로 귀금속을 사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한 금은방 주인이 "지난 23일 손님이 위조된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금목걸이 2개와 반지 2개를 사 갔다"고 신고했다.

신고한 금은방 주인은 이날 인근 은행에서 수표 입금이 되지 않자 뒤늦게 위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또 유사한 범행이 더 이뤄졌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내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5세 아동 학대치사혐의 30대 계모 구속

5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A군이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 계모 B(36)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6일 경련을 일으키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A군은 같은 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당시 치료를 하던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7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학대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경찰은 B씨가 자주 울고 때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뜨거운 물로 짐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디리겟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A군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머리 뒷부분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로 실려간 같은해 12월6일에도 학대 과정에서 경련 증상을 보이며 기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검 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명들을 포함해 상습적인 학대 저항흔적들이 A군의 온몸에서 발견된 점,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등을 근거로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구속했다. 검찰 송치는 이달 말 중 이뤄질 예정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